'95년산 추곡 수매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51

제안년월일 : '95. 11. 8.
제 안 자 : 안 재 원 의원
외 8 인

1. 주 문

- o '95년산 추곡수매가를 작년 대비 13% 이상 인상하고, 수매량은 1천 1백만섬 이상 수매하여 줄 것
- o 농가 소득손실보상금, 환경보호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
- o 민간 유통의 실질적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 15% 이상의 계절 진폭을 허용할 것

2. 제안 이유

- o '95년산 추곡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 줄이고, 수매가를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욕 상실을 가져올 것임.
- o 수매정책의 축소 방침에 따라 농지의 전용과 휴경지 등이 늘어나 쌀 재배 면적의 감소로, 식량 자급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3. 참고 사항

" 없 음 "

'95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건 의 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 민주자유당 총재 / 민주당 총재 / 민주연합 총재 / 자유민주연합 총재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 농림수산부 장관 께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속에 국가 발전과 민생 정책에 전념하시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 민주자유당 총재 / 민주당 총재 / 자유민주연합 총재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 농림수산부 장관 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 이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지난 10월 추곡수매 값을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90만섬 적은 9백 60만섬으로 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1백만섬을 싯가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올해 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 줄이는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이 4백억원에 달하고 수매가를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 2천 3백억원을 포함하면 총소득 감소액은 약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돼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정책 축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휴경등이 늘어나 쌀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식량자급 기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만도 쌀 재배면적 4%인 4만6천ha가 쌀농사를 포기했으며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년에 4%씩 줄어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계 식량 사정이 안보에 필요한 적정 재고율의 4%나 부족한 상태로 올해 세계곡물 가격이 40%나 폭등했다는 FAO(UN식량 농업기구)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을 앞세워 각종 보조금 농업 지원 방법을 무시하고 보조금 감축 의무만을 주장하면서 추곡수매를 축소하는 것은 농민들의 농정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라며,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 부족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 민족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이에 지역농민과 함께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년 연속 수매가 동결에 절대 반대하며,

추곡수매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안정적인 식량자급율 확보와 쌀 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추곡 수매가는 작년 대비 13% 이상 인상하고 국내 쌀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1천 1백만섬 이상 수매

2. WTO 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농가소득 손실보상금, 환경보호 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 제도를 전면 실시

3. 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 15%이상의 계절 진폭을 허용

4. 생산자 조직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통기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곡정책 전반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

5. 경지정리 비용의 전액국고 지원, 농기계 반값 공급의 전면 실시

쌀 생산기반의 대폭 강화 등 위 건의 내용대로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